

확진·자가격리자도 수능 볼 수 있다

코로나19 속 수능 어떻게 치르나

교육부 대입 관리방향 발표

일반 수험생과 분리해서 응시

발열자는 별도 시험실서 치러

대학별 평가는 권역별 시험장 마련

확진자 응시 기회 일부 제한될 수도

오는 12월 3일 실시되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코로나19 특수성을 고려해 확진자나 자가격리자도 응시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수능이후 치러지는 대학별 평가에서는 확진자의 응시 기회가 일부 제한될 수 있으며, 자가격리자는 지원 대학 대신 권역별로 마련된 별도 장소에서 시험을 보게 된다.

교육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질병관리본부(질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시도 교육청, 대학 관계자와 협의를 거쳐 코로나19 대응 2021학년도 대입관리방향을 4일 발표했다.

◇수능 응시, 자가격리예외 사유로 인정 '병원이나 생활 치료시설에서 치러' 교육부는 수능 시험의 중요도와 관리 여건을 고려해 급격히 모든 수험생이 응시할 수 있도록 수험생을 일반 수험생, 자가격리자, 확진자로 나뉘는 관리체계를 구축

한다.

교육부는 일반 수험생을 대상으로 발열 검사해 미발열자는 사전에 고지된 일반 시험실에서 시험을 치르게 할 방침이다. 발열자는 2차 검사 후 증상에 따라 시험장 내 별도 시험실에서 수능을 본다.

별도 시험실은 10월 이후 지역별 감염 상황을 고려해 설치 규모를 결정할 계획이다. 일반 시험실도 한 교실당 수험생을 기존 28명에서 최대 24명으로 제한하고 교실 내 모든 책상에 칸막이도 설치한다.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은 격리 중인 병원이나 생활 치료시설에서 수능을 치른다. 자가격리 수험생은 일반 시험장과 분리된 별도 시험장으로 이동해 응시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방역 당국이 협업체 지역별 확진, 자가격리 수험생 응시 수요를 파악한 후 별도 시험장을 설치하고 이동을 관리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방역 당국과 함께 방역 담당 인력 확보, 업무 분장, 시험실 난방·환기, 이동 시 밀집도 완화 조치 등을 구체화해 9월 말~10월 초에 수능 방역 관련 지침, 2021학년도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을 각 시도에 안내할 계획이다.

◇각 대학 자체 방역 관리대책 수립해야...대입 전형 변경은 이달 말까지 교육부는 각 대학에도 자체적으로 지필·면접·실기 등 평가 영역별 방역

관리대책을 수립해 대학별 평가 때 시행하라고 권고했다.

평가 당일에는 학내 밀집도를 완화하기 위해 수험생의 교내 진입만 허용하고, 학내 학부대 기실은 운영하지 말아 달라고 권고했다.

수험생 간 접촉 빈도나 수준이 높다고 판단되는 평가의 경우 전형 취지와 평가의 공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비대면 평가로 전환하거나 일정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교육부는 당부했다.

아울러 각 대학의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승인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에 이달 19일까지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이 아닌 세부 방식 변경 역시 급격히 이달 말까지 수험생에게 안내해달라고 권고했다. 수험생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자가격리 수험생은 지원 대학이 아닌 권역별 별도 시험장에서 대학별 평가를 치른다. 각 대학은 권역별 별도 시험장을 마련해 시험 관리 인력을 파견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권역별 별도 시험장을 마련하고 대교협, 전문대교협, 방역 당국과 이동제한 수험생 상황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지원자 중 이동제한자 정보를 안내해 대학이 전형을 준비할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코로나19 대응 수능 관리체계

수험생	시험 장소	주요 내용
무증상자	일반 시험장 내 일반 시험실	• 시험실당 최대 24명 • 응시자 간 간격 좌우 앞뒤로 1.5~2m 확보
유증상자	일반 시험장 내 별도 시험실	• 시험실당 최대 20명 • 응시자 간 간격 좌우 앞뒤로 2m 이상 확보 • 별도 시험실·화장실 확보 • 교사장 이동 시 인솔자 배치
자가격리자	별도 시험장	• 별도 시험장·화장실 확보 • 이동 관리 • 자차 이동 원칙(필요 시 응급차 등 이용)
확진자	병원 및 생활치료시설	• 시설 내 수험조건 조성

• 수능 3일 전 및 1주일 전 원격수업 전환 권장
• 마스크 착용 필수, 모든 책상 칸막이 설치
• 퇴실 시 인원 분산

고사장 출입 절차 예시

손소독 → 발열 검사 → 증상 없음 → 건물 입구 → 증상 없음 → 일반고사장
 증상 있음 → 유증상자 관리대기실 → 증상 소실 → 별도고사장
 증상 있음 → 2차 검사 → 증상 지속 → 격리고사장
 유증상자·고위험군 발생 시 관할보건소 신고 → 고위험군

연말뉴스 자료/교육부

경찰청 차장에 송민헌 서울청장에 목포 출신 장하연 경찰 고위직 인사 단행

정부는 4일 송민헌(경북 칠곡) 대구지방경찰청장(치안감)을 경찰청 차장(치안정감)으로 승진·내정하는 등 경찰 치안정감 인사를 단행했다. 목포 출신인 장하연 경찰청 차장은 서울경찰청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진정무 경남지방경찰청장이 부산지방경찰청장으로, 김병구(경남 마산) 제주지방경찰청장이 인천지방경찰청장으로, 최해영(충북 괴산) 대전지방경찰청장은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으로 각각 승진·내정됐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 계급인 치안총감 바로 아래 계급으로, 경찰 내 6명밖에 없는 고위직이다. 이은정 경찰대학장은 유임됐다.

정부는 이날 치안감 승진 인사도 함께 냈다.

우중수 중앙경찰학교장 직무대리, 유진규 서울지방경찰청 경무부장, 김갑식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부장, 이문수 서울지방경찰청 정보관리부장, 김준철 서울지방경찰청 경찰관리관, 최승렬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3부장, 송경에 충남지방경찰청 제2부장이 각각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승진했다. 정은 출신인 송경에 치안감은 1981년 순경으로 들어와 30년 만인 2011년 총경으로 승진한 뒤 지난해 경무관 승진 명단에 오른 데 이어 올해 치안감으로 승진하는 등 여성 경찰 고위직에 올랐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위탁계약 맺은 현장출동자, 공업사 근로자 해당 안돼”

퇴직금 미지급 공업사 대표 무죄

보험회사와 '현장출동서비스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동차 공업사로부터 위탁을 받아 일하는 현장출동자들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다. 임금을 목적으로 공업사 대표의 지휘·감독을 받는 종속 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니라는 게 법원 판단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3부(부장판사 장용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동차 공업사 대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의 공업사에서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3년여간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씨의 퇴직금 720여만원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공업사를 운영하는 A씨는 보험회사와 '현장출동서비스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B씨 등 현장출동자들과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검사는 A씨가 사업장 내 현장출동자들의 대기장소를 두고 중식비를 지급했으며 현장출동자들의 당직·휴가지정에 관여한

점, 4대보험 가입여부 등을 들어 B씨를 A씨의 종속적 관계에 있는 '근로자'로 봤다.

A씨는 현장출동자와는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근로에 있어 지휘·감독을 하지 않았으며 근로자로 볼 수 없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A씨 손을 들어줬다. A씨가 현장출동자들에게 근로 관계를 인정할 정도의 지휘·감독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A씨가 보험회사와 '현장출동서비스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B씨 등 현장출동자들과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점, 현장 출동자들은 A씨 관여 없이 출동 견수를 다른 현장출동자들과 배분한 점, 기본급도 없고 전용 휴대폰 사용요금도 출동자들이 부담한 점, 정해진 근무시간도, 특별히 지정된 근무장소도 없는 점 등을 들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직과 휴가도 검찰측 주장과 달리, 출동서비스 이행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당당한 수준이고 4대 보험 가입 여부도 현장출동자들 의사에 맡겨져 있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운영 재개 앞두고 방역 철저

4일 오후 광주시 북구 오동동 어린이교통공원에서 광주 교통문화연수원(원장 조광환)직원들과 광주어린이안전학교(회장 김은미)회원 및 학생들이 운영 재개를 앞두고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화물차 덮개 열고 운전 “광” 구조물 충돌 사고 잇따라

화물 적재함 덮개를 열고 달리는 도로 구조물을 들이받는 화물차들로 인해 일대 교통이 통제되는 등 운전자 불만이 잇따르고 있어 경찰의 지도·점검이 요구되고 있다.

4일 광주광산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0분께 광주시 광산구 월전동 평동산단 내 한 도로에서 A(61)씨가 몰던 5t 화물차가 적재함을 열고 주행하던 중 높이 제한 구조물을 들이받았다.

A씨는 이른바 왕비대 화물차량 적재함 덮개를 열고 이동하던 중 이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화물차량과 부딪힌 높이 제한 구조물(높이 4.4m)이 쓰러지면서 경찰은 복구 작업이 진행되면서 10일 간 인근 도로 통행을 통제한다.

평동산단 내에서는 적재함 덮개를 열고 다니는 차량들로 인한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달 7일에도 4.5t 화물트럭이 적재함 덮개를 열고 진행하던 중 높이 제한 구조물을 들이받으면서 5일 간 일대 도로 통행이 제한된 바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30년 경력의 조역사 010-6211-4585”

수익형 추천 물건

- 건 물** ▶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구)
토지 : 912.50㎡(276평) 건물 : 1,477.64㎡(446.9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48억
대로변, 광주롯데백화점 인근
- 건 물** ▶ 광주 광산구 송정동(일반상업지역)
토지 : 1,349㎡(408평) 건물 : 1,350.03㎡(408.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61억 조정가
대로변, 광주송정역 인근
- 의료시설** ▶ 광주 동구 대인동(일반상업지역)
토지 : 514.40㎡(155.6평) 건물 : 2,143.08㎡(648.2평)
지하1층 지상5층 매매가 : 29억 5천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수익률 최상, 입지조건 최상 건물 다량 보유"

경매 물건

- 의료시설** ▶ 전남 영암군 영암읍 남풍리
토지 : 17079㎡(5166.4평) 건물 : 9059.72㎡(2740.6평)
감정가 79억 1천5백만원 최저가(56%) 11억5천7백만원
- 공 장** ▶ 전남 나주시 동수동
토지 : 4561.8㎡(1379.9평) 건물 : 3334㎡(1008.5평)
감정가 57억 4천6백만원 최저가 (36%) 20억 6천만원
- 공 장** ▶ 전남 나주시 문평면 옥당리
토지 : 16529㎡(5000평) 건물 : 1296㎡(392평)
감정가 28억8천7백만원 최저가 (70%) 20억 2천1백만원
- 공 장** ▶ 전남 나주시 운곡동
토지 : 14000.1㎡(4235평) 건물 : 586㎡(177.3평)
감정가 22억 2백5십만원 최저가 (70%) 15억4천2백만원
- 공 장** ▶ 전남 나주시 문평면 동원리
토지 : 2051㎡(620.4평) 건물 : 451.1평
감정가 10억2백5십만원 최저가 (70%) 7억2백만원

"광고 외 모든 경매물건 상담, 진행가능"

광주·전남 병원건물(요양,한방)매매·임대 다량보유 /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공인중개사 전 민 규 062-714-2251, 010-4234-8640